

## "단순업무는 보조원...약사, 복약지도 등 전문약료 집중"

뜨거운 감자 '약국보조원'...약사-국민 니즈 합치돼야 제도화 가능

이정환 기자 2018-11-26 06:25:25



약국 약무보조원 합법화 이슈는 수 십년째 찬반양론이 대립 중인 갈등의제다. 전문·일반약 조제·판매는 약사 고유 권한이므로 보조원을 합법화하면 안 된다는 견해와 합법화로 단순업무를 축소하고 약사직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하는 게 약사사회 현실이다.

25일 대한약국학회는 '약국 보조인력 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찬반 갈등 의제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약국보조원을 약국 경영에 활용하고 있지만, 정책 제도화 필요성을 놓고는 첨예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게 약국산업 전문가들의 공통견해다.

특히 소비자와 환자가 약국에 원하는 서비스 종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약사와 약국 내 근무인력의 업무구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약국산업 전문가들은 약국보조원 선진화·제도화는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대중이 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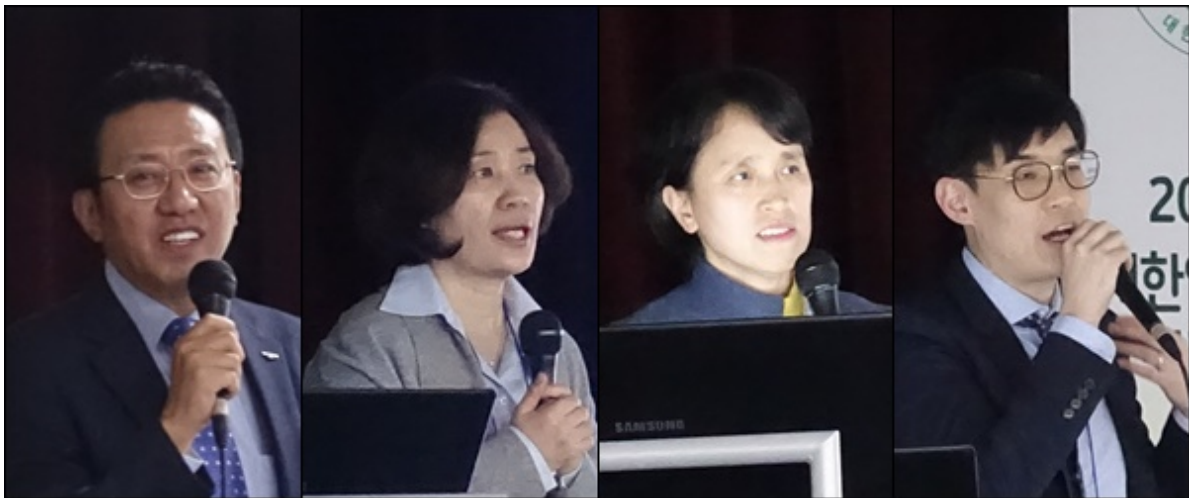
약국서비스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일동제약 이동한 상무는 약국보조원 제도 도입 시기는 약사회와 사회가 합의를 이루는 시점이라고 요약했다. 약국보조원에 대한 약사 니즈와 국민 이해가 균형을 이룰 때 제도가 시행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특히 이 상무는 자신의 연구를 인용해 약사와 약국보조원 등 약국 근무자 수는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약국에서 일하는 인력이 많을 수록 유의하게 의약품 매출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이 상무는 "약국보조원을 찬성하는 측은 약사 전문성을 확대하고 업무량이 준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반대 측은 불법 활성화와 전문카운터 양성을 우려한다"며 "이처럼 보조원 이슈는 찬반이 팽팽히 맞선다. 의사보조인력이나 간호보조인력 등 타 직능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게 위험이 덜하다"고 했다.

이 상무는 "해외는 파머시 테크니션이 정식 직능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 결과 약국 근무자는 많을 수록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을 증대시켰다"며 "결국 약사 니즈와 국민 이해가 균형을 이루는 때가 약국보조원 제도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동제약 이동한 상무, 성균관약대 박혜경 교수, 서울대병원 조윤숙 약제부장, 와이즈셀렉션 남윤진 대표(왼쪽부터)

해외는 약국보조원을 어떻게 제도화했을까.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는 약사와 파머시 테크니션, 약국 직원이 함께 일하는 환경이 구축된 상태다.

성균관대 약대 박혜경 교수는 이 국가들은 국민이 약사에게 원하는 고품질 약료서비스와 확대된 약국 서비스 등이 약국보조원 제도화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약국보조원을 도입하면 약사의 단순조제와 잡무 비중이 줄어들면서 복약지도 서비스 등 약료 품질이 좋아진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이미 대부분 약국이 약무보조원을 활용하는 상태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만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약분업 후 약사에게 원하는 대중의 직무 수요가 바뀌었다. 해외 역시 약국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보조원 관리제가 발전했다"며 "우리나라도 약사가 조제, 재고정리, 보험 청구, 질병관리 등 업무를 혼자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조원을 공식화 할지가 논란"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약사와 비슷한 수의 테크니션이 약국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도 대중의 약료 요구가 증가하고 의약품 약효, 부작용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순조제는 테크니션에게 일임하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영국은 테크니션이 활성화되면 약사 전문성이 제고되고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일 것"이란 확신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약국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보조원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만성질환, 고령화 지속으로 조제 업무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약국 업무가 늘어난다"며 "약사가 전문 약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고 보조원을 제도화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병원약사회 표준화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조윤숙 약제부장은 약국보조원 제도화가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약사 인력수급이 불안정한 병원 약제부의 경우 약국보조원 제도화 필요성을 더 크게 체감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태 이후 전국 대부분 약국이 간호사가 맡고 있던 주사제 분주 등 관련 업무를 병원 약제부에 맡기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 부장은 보조원을 제도화하면 집단화로 직능 이기주의와 타 직능 간 갈등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부장은 "다수 병원 약제부는 보조원 업무범위를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 조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약국보조원 민감도가 높아졌다"며 "일단 서울대병원은 약사가 즉각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수준의 일은 보조원이 하도록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약을 창고에서 가져와서 조제실에 껍질을 벗겨 채우거나 재고파악 등 단순 노동이 보조원 업무 대부분"이라며 "때때로 PTP약을 나눠 담거나 영양수액 라벨링 등도 맡긴다. 하지만 병원 약제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조원 업무가 무자격자 조제가 될 수 있다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가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할지 현장과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시대가 급변한 만큼 약사의 정의도 변화될 때가 됐다"며 "정부기관의 병원약사 관리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자를 마련해야 약제부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스타트업 기업 와이즈셀렉션을 경영중인 남윤진 대표는 약국보조원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약사가 더 큰 직능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조원이 제도화돼야 물리적 여유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남 대표는 다만 약사와 보조원 간 업무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직능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 대표는 "약국보조원은 국내에서 음성화됐다. 이를 제도화하려면 비용과 편익 분석이 필수적이다. 제도화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이대로라면 개국약사들은 조제, 투약에만 매몰된다. 약사와 보조원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치밀하게 제도화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이미 해외 다수 국가가 보조원을 제도화했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중이다. 중국은 무인처방이 가능한 24시간 약국이 성행중"이라며 "다만 보조원이 20년 뒤에도 존치할지 직무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제도화에 다가서야 한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

## 관련기사

- ▣ 최광훈-김대업, 성분명 처방·한약사 등 난제 해법은? 2018-11-16 06:24:49
- ▣ 새물결약사회 "누굴 위한 약무보조원 도입 논의인가" 2018-10-15 06:29:40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팜에 있습니다.